

심포지엄「韓國社會의 發展과 國土構造의 再編成」 제 1 주제

國土의 再認識：問題와 未來像

柳 佑 益*

—〈차 례〉—	
1. 서 론	4. 국토의 문제와 여건 변화
2. 국토란 무엇인가?	5. 국토의 미래상
3. 국토를 어떻게 볼 것인가?	6. 요약과 결론

1. 서 론

한 나라의 영토, 즉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국토라고 한다. 국토는 국민이 몸담아 살아가는 땅으로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세가지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국토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며, 국민이 그들의 삶을 펼치는 터전이다. 국민은 국토가 부여하는 여러가지 조건에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독특한 삶의 양식을 다채롭게 전개하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결과를 다시 국토의 구성구석에 채워 남긴다. 따라서 국토는 국민의 온갖榮苦가 겹겹이 쌓이고 새겨진 역사의 현장이고 미래의 국민에게 넘겨질 영원한 遺産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집단은 그들의 생활공간을 知覺하여 그에 대해 단편적이든 종합적이든 어떤 틀잡힌 생각을 갖게 된다. 그것은 領域(territory)에 대한 일종의 본능적 의식—배타적 소속감 내지 애착—을 바탕으로 하고, 집단 成員이 갖는 세계관과 함께 공간 지각의 체계를 반영한다. 이렇게 체계화된 공간적 인식의 결과를 국토의 경우 國土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관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형성되고 세대를 이어 학습되는 것으로, 역사가 오랜 민족국가일수록 그 뿌리가 깊고 틀이 확고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 定住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장소에 대한 連帶는 강해지고, 관념은 고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국토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제 2세 국민에게 국토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함께 올바른 국토관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국토관이 국가관의 토대가 될뿐 아니라, 국토에 대한 태도, 나아가 삶의 양식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들이 가진 국토관을 바탕으로 국토를 이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개발과 보전을 포함하는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즉, 국토는 단순히 주어진 것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이라기 보다 오랜 옛날부터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진 모습으로 넘겨져온 역사적 산물이며, 오늘 우리가 어떤 인식의 토대 위에 서느냐에 따라 내일 우리 후손이 물려받게 되는 국토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우리 국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몇가지 통용되는 고정관념의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바른 국토관의 정립을 위한 학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그러한 국토관을 바탕으로 국토의 미래상을 모색해 보고자 씌어졌다.

2. 국토란 무엇인가?

국토관에는 두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 그 하나는 국토가 갖는 의미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재하는 국토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image)이다. 여기서는 우선 '국토란 무엇인가'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국토에 대한 가장 소박하고 naive한 개념은 그것을 단순히 區劃된 地表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다. 국토란 白地圖에 그려진 기하학적 평면 공간(empty space)으로,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가는 단지 자연과 사회경제적 變數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개념아래서는 공간에 대한 物理的 思考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사물이나 현상의 立地는 기하학적 위치상의 문제로 취급되고 만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토 안에 있는 사물의 총량만이 문제가 되므로, 매우 非空間的인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또하나의 개념은 국토를 排他的 領域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境界를 중심으로 한 안팎의 관계만이 중요시된다. 즉 국토는 국민의 生存空間으로,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外侵으로부터 방어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국토안의 문제보다는 接境國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보다 進一步한 개념은 국토를 생산활동의 기반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의 생산성, 또는 附存資源의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토를 평가한다. 국토의 가치를 좁은 의미의 경제적 尺度로 재계되므로, 국토의 능율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다른 가치를 압도하게 된다. 動物生態學的 관점에서 보자면, 앞의 것은 방어공간이고, 뒤의 것은 먹이공간이다. 먹이공간은 넓을수록 좋겠지만, 방어공간은 좁을수록 유리하다. 領域은 이 두 相反되는 요건의 절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토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은 그것이 국민의 生活空間이라는 것이다. 즉, 국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온갖 존재의 행위를 수행하는 장소의 집합인 것이다. 국민은 국토 안에서 居住, 勞動, 給養, 教育, 休養, 共同生活, 交通 및 通信의 제반 활동에 관한 공간적 欲求를 충족시키면서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토를 기하학적 평면으로 본다면 크기와 모양만이 문제될 것이고, 지켜내야 하는 영토

로 볼 때에는 위치와 국경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또, 국토를 먹이공간으로 파악하면 그 생산가치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토는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아가 국토는 그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성 및 내적, 외적 구조와 그 잠재력을 통해, 그리고 국민이 부여하는 의미를 통해 복합적 유기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국토는 변화한다. 그 변화는 사회변동과 맞물려 있다. 사회변동은 국토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변화한 국토는 다시 사회를 담고 그것을 규제한다. 지금 우리 국토는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미증유의 격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맞이하게 될 後期 産業社會는 국토에 더욱 고도로 분화된 기능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는 한편으로 이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제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3. 국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토가 갖는 의의는 국토의 位相과 屬性에 대한 관념으로 구체화된다. 즉, ‘국토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그 위치와 범위, 형태와 크기 및 속성등에 대해 어떤 주관적으로 인식된 이미지를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통용되어 온 몇가지 고정관념이 있다.

—우리 국토는 錦繡江山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東端에 붙은 半島이다.

—작다.

—산이 많다.

—자원이 빈약하다.

이상 다섯개의 命題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가진 국토관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 국토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山水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빌어 국토에 대한 心情的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겠다. 北半球 中緯度 지대에 위치하여 大陸性 氣候를 가지므로 氣候가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다거나 山川과 聚落과 田畠이 오밀조밀 어울려 그 景觀이 秀麗하다는 것을 넘어, 내 나라 내 땅이기에 귀하고 格別한 情이 가며 아름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국토라는 실제하는 대상에 대한 知覺을 나타낸다고 보아, 애국가나 무궁화와 같이 상징적이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요구하지 않는, 허구적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수강산’은 나무랄데 없이 우리 국토를 상징한다. 다만 ‘아사달’ ‘高麗’ ‘朝鮮’과 같이 自然美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는 의미를 함축하여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라는 語義를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그것은 字句를 바꾸거나 보태어서 될 일 이라기 보다 국토에 대한 인식체계 전체 또는 그와 관련된 언어관습의 문제일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은 半島라고 하는 것은 사실대로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굳이 그렇게 규정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半島가 갖는 附隨性, 周邊性이란 位置的 특색을 들어 한국의 운명을 당연히 受動的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¹⁾ 中國은 우리나라를 東夷라 하여 邊方으로 취급하였거니와, '半島가 大陸과 海洋의 架橋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논리는 倭亂 以來로 日本 侵略主義가 내세웠던 자기 합리화의 명분이었다. Heartland이론이라는 地政學的 假說을 빌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이 반도에서 완충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列強의 支配論理에 다름 아니다. 즉, 半島의 位置論은 이웃의 列強들이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支配(意圖)를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낸 似而非 地理的 決定論이다. 日帝의 어용 史學者들은 한국사를 지배하는 법칙을 지리적 조건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半島論에서 他律性을 끌어내 自主性을 덮으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事大主義가 한국사를 일관하는 법칙인양 오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민족적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어용 사학자들의 자기 진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국토의 위치적 특성에서 半島라는 形狀이 갖는 의미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반도의 운명이 外勢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억지이다.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제국,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세계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보는 것으로 반증은 충분할 것이다. 현대 문명을 앞장서 이끈 유럽도 其實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도이다. 內陸과 沿岸, 半島와 섬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잠재력을 지닌다. 문제는 오히려 그러한 環境의 所與를 주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며, 歷史를 움직이는 힘의 主體가 어느쪽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 東端의 半島'라는 表現은 '아시아——太平洋圈의 中心'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美·日·中·蘇의 勢力이 交叉하는 세력다툼의 場으로보다는 그러한 勢力들이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권역의 中心部로 보는 視角이라야 우리 국토가 主體가 되는 것이다. 남의 땅에서 우리 땅을 보지 말고 우리 땅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셋째로, 우리 국토가 작다고 하는 것이다. 흔히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云云하여 국토가 좁다는 말들을 한다. 세계에는 우리나라 보다 큰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 나라보다 작은 나라는 그보다 훨씬 많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의 list를 만들어보면 대부분이 小國들이다. 반대로 大國들의 list를 들여다보면, 또한 못사는 나라들이 수도룩한 것은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나라가 클수록 富強하게 된다는 것은 일응 논리적이다. 國際政治에서의

1) 李基白, 1972(14版). 韓國史新論, 一潮閣, p.1f.

힘의 논리나 국민경제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비스마르크 제국의 통일이 독일이 부강하게 된 계기라는 것이 사실이듯, 통일된 독일제국에 끼지 않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독일인들도 결코 독일 국민에 비해 못살지 않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은 지역이 합쳐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당연시되고, 국가의 분열(Balkanisierung)이 부정적으로 보아졌던 때가 있었다. 그럼에도 유엔 가입국이 창설 당시의 3배에 이르는 지금도 작은 나라들이 꾸준히 새로 태어나고 있지 않은가?²⁾

국토가 크고 작은 것은 상대적이고, 좁고 너른 것은 쓰기에 딸린 문제이다. 작은 국토를 너르게 쓰면 작은 나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가 '손바닥만 하다'고 하는 말이 갖는 보다 警戒해야 할 점은 그 말이 지시하는 劃一的 性向에 있다. '자빠지면 코닿을 거리안에서 무슨 地域性이나'고 으박지르는 편견을 지리학자들은 자주 듣는다. 그것은 多樣함의 長點—自由와 個性, 安定과 아름다움 등—을 모르는 無知의 소치일 뿐이다. 작은 그림에서도 여러가지 색깔이 어울려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듯, 작은 국토라고 해서 자연환경과 歷史·文化的 전통의 차이에 따른 생활의 다양성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모든 先入見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는 결코 작지가 않다.

넷째로, 산이 많다는 것은 국토에서 山地(또는 林野)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말의 基底에는 산을 비생산적 공간으로 보는 생각이 깔려있다. 산이 많다는 것은 곧 들(耕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이다. 국토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몫이 66.4%나 된다. 맑은 날 높은 산위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 산들이 첩첩히 쌓여 파도처럼 출렁대는 사이 사이로 골짜기가 보일듯 말듯 이어지는 것이 우리 국토의 모습이다. 대신 一望無際의 너른 들판은 드물다. 우리 민족은 산에 둘러싸여 살아 온 것이다.

'高句麗'라는 말은 山高多丘水麗(丘→句)에서 왔다고 한다.³⁾ 한국인에게 있어 산은 敬畏의 대상이었다. 산에서 해가 뜨고 지며, 강이 시작되고, 온갖 생물이 자라나므로, 산은 생명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吉凶禍福이 산에서 비롯된다 하여 山神에 祭지내고, 산에 치성드리고, 산에서 修道하며, 山勢로 名堂을 찾아 묻히는 민족이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그러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산은 몸을 숨기는 곳이 되었고, 농경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산은 필경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러한 觀點은 극복되어야 한다.

산은 미래의 생활공간이다. 그것이 갖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나 山容水態의 景觀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산은 自然으로 自淨의 母體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전판이기

2) Schumscher, E.F., 1977, Die Rückkehr zum Menschlichen Maß (Small is Beautiful), Rowohlt, S. 57f.

3) 朴泰洵, 1983, 國土와 民衆, 한길사, p.17.

때문이다. 산은 말 그대로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산에 기대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그 산들이, 알프스나 히말라야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시베리아나 북유럽의 벌판같이 단조롭고 보잘것 없지도 않은, 부드럽고 순하되 千變萬化의 아름다움을 갖춘 것임에랴.

다섯째로, 우리 국토에는 부존자원이 빈약하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지하자원들이 많이 나지 않는다. 석유는 없고 철광석과 석탄은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의 박물관이라고 불리울 만큼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난다. 지하자원에 국한해서이지만, 아직은 자원이 빈약하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다. 왜냐하면 자원부존상태에 관한 우리의 정보가 아직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은 끊임없이 새로운 物質을 資源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부히 가진 자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자원 중에서도 중석과 시멘트는 세계적인 생산국이지만, 水資源, 太陽熱, 潮力을 포함한 海岸자원, 무진장한 石材등은 그 잠재력이 정확히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 풍부한 자원을 잘 개발하면 부족한 자원이 補完 또는 代替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산업과 생활을 우리 국토에 풍부한 자원과 연계시켜 그 이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天惠의 기후에 山紫水明한 자연경관이나 그림 같은 해안선과 섬들이 빚어내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 어느 한 구석 빼어 놓을 곳없이 채워진 고유한 전통문화의 경관은 다른 어떤 자원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관광·휴양자원이다. 金剛山도 食後景이라 했지만 나라 안의 수많은 金剛山을 밀천으로 배불리 먹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새로운 자원을 찾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가지지 못한 자원을 곱씹고 애태우기 보다는 넉넉히 가진 자원을 잘 쓸 방도를 구하면 어제의 자원 빈국은 내일의 자원 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컨대 국토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르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고정관념들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修正, 代替되어야 할 것이다.

4. 국토의 문제와 여건 변화

국토에 대한 바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루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의 우리 국토가 어제의 연속선 상에 있듯이, 내일의 國土像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국토의 未來像을 찾는 일은 오늘의 국토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그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의 내용과 그 공간적 해석이 문제된다. 살기 좋다고 하는 주관적인 價値判斷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에서의 욕구와 그 충족을 위한 수

단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역시 현재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경향으로부터 도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토의 미래상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국토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의 여건과 그러한 여건 하에서의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예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한 가치관에 입각한 생활양식에서 제기되는 제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국토 공간의 像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다.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分斷에 의한 一體性(Einheit)의 상실 일 것이다. 國土의 분단은 植民統治 下에서 피동적 구조로 전락하여 황폐되었던 국토의 일체성을 깨어버림으로써 그것을 구조적으로 왜곡시키고 기능적으로 마비시켜 버렸다. 그 후반세기가 가까와 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쪽씩의 ‘국토’는 기형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독자적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지도에서 休戰線 부근의 도로망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끊어진 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 새로운 연결을 찾고 있는 모양이 마치 肢體가 절단된 부위에서 혈관이 새로운 흐름을 찾아 영키고 있는 것을 연상케 한다.

다음으로는, 남한에 국한하여, 공간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巨大都市 중심의 獨寡占的 공간구조를 강화시킴으로써, 한쪽은 過大·過密로 다른 한쪽은 過小·過疎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로의 過度한 集中이 현재로서는 不均衡의 최대 원인이자 문제의 核心이다. 釜山·大邱·仁川도 이미 巨大都市의 대열에 들어섰고 光州와 大田도 인구 백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방후 대략 10년에 하나 꼴로 인구 백만 이상의 거대도시가 늘어난 셈인데, 현재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들 6대 도시에 살고 있다. 의 사결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地域 總生産, 金融, 技術과 情報 등에서 서울을 비롯한 거대도시들의 점유비는 날로 커지고 있다.

거대도시가 지배하는 삶의 양식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대도시가 발생하는 갖가지 도시 문제들이 이미 赤信號를 보내고 있다. 교통, 주택, 치안, 환경공해 등의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설마 설마 하다가 서울 인구는 드디어 천만을 넘어섰고, 서울 시내의 도로교통은 수년 안에 완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측정치는 ‘보안 통제’ 되고 있고 治安不在라는 말이 마침내 낱설지 않게 되었다. 다른 거대도시들의 문제 역시 서울에 가리워 있을뿐,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크게 나을 것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국토의 또 다른 한쪽은 인구나 생산요소가 계속 빠져나가 공공의 서비스를 유지하기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대도시들의 강력한 흡인력이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을 뿌리째 뽑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弊一言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의 마음이 이미 사는 곳을 떠나고 있다. 도시의 학교는 敷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콩나물 교실로도 2부제 수업을 먼치 못하는데, 농촌 학교는 운동장만 클뿐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사례가 줄을

이고 있다. 이 대조적인 현상은 오늘의 국토공간이 갖는 二重構造를 여실히 보여준다.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이 수출중심의 공업화에 의해 주도되면서, 首都圈과 東南臨海工業地域의 두 핵심 경제지역을 잇는, 우연치 않게도 日帝의 植民地 經營을 통해 구축된, 京釜軸이 다시 強化되었다.

서울 중심의 거대도시화와 京釜軸의 강화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수반하였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취락의 계층 체계와 연계되고 공업화 수준의 지역차와 결부된 생활의 질 또는 기회의 지역격차이다. 지역격차는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였다. 地域感情을 政治權力의 지역적 偏重과 그 爭取 및 維持를 위한 조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발전에 대한 소의 또는 개발격차가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요컨대 공간구조의 불균형은 갖가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로부터 야기된 갈등은 사회의 통합에 심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의 미래상은 그것을 是正한 토대위에 서야 한다.

우리 사회는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 맞이하게 될 후기산업사회에서 몇가지 특징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도시적 생활양식이 보편화하고 소득과 여가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과 문화경관 등 계량이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自我 實現의 欲求에 있어서는 物質的인 것과 함께, 또는 그것보다 더, 精神的이고 文化的인 價値를 중시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과 교육의 質的 機會에 대한 욕구는 居住地 選擇에 지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통과 통신의 혁명적 발달로 거리저항이 시간적으로 수렴되고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운송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산업의 입지는 적어도 운송거리의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반면에 移住, 通勤, 環境汚染, 交通混雜 등 근로자 개인이나 社會의 經費로 轉嫁되던 費用이 企業經營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는 결국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지향하게 될 것이다. 場所가 갖는 環境的 魅力에 대한 重要性은 이리하여 家口와 企業의 空間活動 특히 居住와 産業 立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는 地方化와 國際化가 진전될 것이다. 특히 政治權力의 地方分散을 骨子로 하는 地方自治의 實施는 국토의 공간구조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地域主義的 경향이 일단 強化될 것이고, 社會全般에 걸쳐 意思決定權과 機能의 地方分散이 하나의 흐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各 地方은 中央(서울)이 支配하는 劃一性을 벗어나, 個性이 살아나고, 固有性이 부각되는 多樣한 地域性을 갖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벽을 뛰어넘는, 또는 그 벽을 허무는, 국제적 교류가 급증하는 것을 필두로 국토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긴밀한 국제 관계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태

평양 경제권의 선·후진국을 잇는 南北關係에서, 그리고 中·蘇의 開放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北方政策이 示唆하는 바와 같은 東·西關係에서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앞서 言及한 統一, 또는 南北韓間 긴장완화를 통한 一體性 회복에의 접근 노력등이 이러한 國土의 國際的 役割에 기폭제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 국토의 미래상

진술한 국토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서 보태어지고 변화될 공간적 수요들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국토의 미래상이 그려질 수 있다면, 그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토의 일체성(Einheit)이 회복되어야 한다. 分斷된 국토는 반쪽이다. 그 국토의 一體性은 천여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남과 북으로 분리된 후 수십년이 지났다고 하나 반쪽만의 個體가 온전해지기에는 태부족의 짧은 시간이다. 국토가 분단된 것이 어디 땅만 갈라진 것인가? 統一을 절대의 命題로 받아들일 때, 아니면 우선 긴장완화를 통한 활발한 교류를 전제할 때, 한민족 전체의 생활공간으로서 국토가 일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재개되어야 하며 지속되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분단을 永久化하고 助長하는 소모적인 경쟁 차원의 국토의 구조 및 형질 변경이 지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고 북한을 포함하는 원대하고 사려깊은, '국토종합개발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 이 구상은 가까운 간선 교통망의 연계, 水系 및 流域의 통합 관리에서 시작하여 멀리는 산업배치를 고려한 토지 이용의 체계, 동력과 용수의 공급체계, 생산물의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것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취락 및 기능의 공간체계에 이르기까지, 선언적 의미 이상의 실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中國, 蘇聯과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토의 남북을 관통하여 대륙으로 연결되는 국제 철도 및 고속도로를 놓는 것은 큰 골조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철도의 경우에는 이미 부설된 노선의 改修로 가능할 것이나, 고속도로는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木浦에서 시작하여 仁川—海州—新義州를 거쳐 中國大陸과 연결하는 西海高速道路와 釜山을 起點으로 江陵—咸興—清津—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로 뻗는 東海高速道路를 건설하고,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남으로는 해저 터널을 통해 일본과 연결시키고 북으로는 鐵原—陽德—江界를 지나 모스크바까지 뻗는 내륙 대동맥으로 연장시켜야 한다는 구상⁵⁾은 일단 대담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非武裝地帶의 평화적 이용 방안, 예를 들어 세계적인 自然公園, 平和와 民族和合

4) 權源庸, 1988, "國土開發計劃, 무엇이 문제인가," 民族知性 5월호, pp.48-55, p.49.

5) 黃鏞周, 1988, "國土計劃과 國土의 未來像", 民族知性 5월호, pp.56-64.

을 상징하는 民族公園의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봄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각종 군사시설로 요새화해가는 休戰線 양쪽의 모습은 논의로 치더라도, 한쪽에서 소위 ‘금강산 댐’을 쌓고 다른 한쪽에서 대응댐(‘平和의 댐’)을 쌓는 일, 심지어 땅굴을 파고 장벽을 쌓는 일 등은 민족적 에너지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토에 아프고 수치스러운 傷處를 내는 일이다.

국토의 지도로 남한만을 그려 놓아도 별 저항을 느끼지 않을 만큼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도 큰 일이지만 텔레비전의 일기예보에서 날마다 대하는 고약한 투영법의 기이한 지도처럼 국토의 이미지에 분단을 고착시키는 여러 사례들도 정신차려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언제부터인가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충청남·북도를 ‘중부권’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좋은 이름 다 두고 남동권, 남서권이라는 명칭으로 기이한 지역구분을 하는 한국지리의 교과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일이다. ‘나라를 지키기보다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先賢의 말씀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일컬음인가 보다.

둘째, 국토의 공간구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아마 조화와 균형일 것이다. 공간구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모든 활동이 경제적이고, 그 속에서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된다. 그것은 人間的인 尺度에 過하지도 不及하지도 않은 中庸의 상태이다. 不變의 고정된 中間이 아니라 時中の 原理에 따라 力動하는 平衡이다. 그 關鍵은 과도한 集中의 흐름을 分散으로 바꿔놓는데 있다. 集中의 分散이란 分散的 集中(dezentrale Konzentration)⁶⁾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中·下位 계층의 취락에 대한 기능적 강화를 뜻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가 소수의 거대도시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지배되는 획일적 공간구조가 아니라는 데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反集中 過密의 概念(Antiballungskonzept)을 확고히 하고 分散을 위한 政策을 國家 存立의 次元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게든 되려니’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아니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안이하게 대도시 중심의 成極戰略(polarization strategy)의 단맛에 빠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⁷⁾ 窮則通이라지만 그것은 必死의 노력을 前提할 때이다.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더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대도시의 과밀문제, 농촌지역의 피폐, 지역격차의 첨예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식의 왜곡과 이탈은 이제 常軌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巨大都市化의 억제와 분산이라는 정책은 落後 農村地域의 개발과 中小都市의 育成으로 和答하지 않고는 成功할 수 없다. 남한의 지도 위에 커다란 물음표를 그려보자. 江華 앞바다쯤에서 시작하여 東으로 휴전선 남쪽을 따라가다가, 雪岳山을 바라보며 南으로 휘어 太白山脈을 탄다. ‘寧·平·旌 地區’를 지나, 다시 小白山 줄기를 잡고 남서쪽으로 미끌어지면서 죽령, 새재, 추풍령을 건너뛰면, 德裕山 부근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 남쪽을 향해 활

6) Akademie fü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ARL), 1982, Grundriss der Raumordnung, S. 228 f.

7) 柳佑益, 1983, “韓國 地理學에 있어 地域政策의 爭點”, 地理學論叢, 제10호, pp.87-106.

처럼 휘면, ‘茂·鎭·長’, ‘任·淳·南地區’를 거쳐 이 시대의 아픔을 떠맡아 앓는 光州에 맞닥들이게 된다. 곧장 내리달아 海南 땅끝에 이르러 多島海를 헤치다 보면 멀리 濟州島, 거기서 물음표의 점을 찍는다. 이 물음표는 두텁고 넓은 띠가 되어 남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덮고 있다. 물음표로 패이고 있는 골짜기를 채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곳의 지방중심도시들과 농촌중심도시들이 저마다 개성있는 모습으로 제구실을 하게 될 때 우리 국토는 비로소 조화와 균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물음표의 지대가 우리 국토의 미래를 묻고 있다면, 그 답은 分散을 통한 균형개발이다. 그것이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의 보전이다. 미래의 사회는 물질적 풍요 못지 않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손상되지 않은 자연을 요구할 것이며, 생활의 편리함만큼이나 조상의 손때가 묻고 습결이 느껴지는, 역사의 의미가 보전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보람을 크게 살 것이다. 인구 증가, 산업의 발달과 소비욕구의 증대는 국토의 잠재력을 끝없이 착취하고, 개발의 깃발 아래서 국토는 변형되고 파괴되고 오염된다. 쾌적한 환경과 유서깊은 문화경관에 대한 ‘保全’의 당위는 보다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開發’의 당위와 일종의 목표갈등(Zielkonflikt) 관계에 있다. 妥協과 調整은 전통적 해결 방법이지만, 언제나 옳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入山禁止 팻말을 세우고 골짜기의 쓰레기를 줍고, 지붕에 페인트 칠하고, 담장에 시멘트 바르고, 도로변에 꽃심고, 빌딩 앞에 장식물 세우는 일이 환경정책일 수는 없다. 농부가 제 먹을 것을 따로 가꾸고, 공장의 폐수처리 시설이 수출경쟁력의 논리에 밀려나서는 안된다. 그러다가는 國破山河在가 아니라 山河破然後에 何國在가 될 것이다. 自然環境과 文化景觀의 保全, 그리하여 健康하고 의미깊은 國土, 그것은 아마도 미래의 국토정책이 추구해야 할 질적인 측면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6. 요약과 결론

國土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國土觀은 수정되어야 하며, 열강의 지배논리로 조작된 고정관념은 불식되어야 한다. 국토의 위치적 속성은 그것을 인식하는 관점의 문제이며 국토의 구조를 짜기에 따라서는 좁은 땅이 너르게 쓰일 수 있다. 국토의 잠재력은 그것을 바로 보고 일깨워 내는 일이 중요하다.

서울을 비롯한 거대도시로의 집중과 하위 취락체계의 붕괴, 京釜軸의 강화에 따른 지역 격차, 그것이 다시 정치권력의 공간적 배분문제와 결부되어 유발시킨 지역감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공간적 문제들이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자연과 문화경관등 비경제적 환경요소의 가치가 중시될 것이다. 공간거리의 시간적 수렴에 따라 거주지 선택과 산업입지는 장소의 매력을 중시하면서 지금보다도 자유로와질 것이다.

정치권력의 지방분산이 주도하는 지방화와 中·蘇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교류 증대는 우

리 국토의 위상과 여건을 바꿔놓고,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토가 지향할 바람직한 미래상의 기본원리는;

- 1) 국토의 一體性 회복,
- 2) 국토 공간구조의 조화와 균형,
- 3)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은 지금까지의 시각을 고치고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만에서 전국토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평지에서 산지로,

—내륙에서 해양으로,

—일방적 개발에서 보전을 중시하는 절제된 개발로,

—물량적 사업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 획일적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다양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그러나, 국토를 부동켜 안고 땀흘려 일하는 연구의 결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게 된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창설 30주년에 세삼 우리 국토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소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토 론

사 회 자 :	김 덕 현	(경상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김 부 성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장 춘	(경기대학교 교수)
	임 덕 순	(충북대학교 교수)

사회자 : 발제자께서 포괄적인 주제를 설득력있는 논지 전개로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무리없이 잘 이해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토론의 편의를 위해서 요지를 짧막하게 정리하여 오늘 토론을 좀더 유익하게 하고자 합니다. 류교수께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고정관념으로서의 국토관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국토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좁은 땅을 넓게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요점으로서 오늘날 국토환경의 변화와 관련시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토 미래상의 기본원리 세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민중의 폭발적 통일 욕구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지리학계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국토의 일체성 회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곧이어 임덕순 선생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토공간구조의 조화와 균형’, 즉 거대도시 중심의 국토 양극화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발전 등에 관한 문제로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의 김부성 선생님께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의 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갈등관계인가 아닌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줄곧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이장춘 교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국토상에 대한 문제는 토론자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공동주제로 삼아서 얘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상 토론자가 질문할 때마다 발제자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토론자 세분의 전체적인 토론이 끝난 후 발제자가 토론의 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덕순 : 이 토론에 임하면서 세가지 전제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발제강연 내용에 관해 주로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정치지리학, 국제관계 지리학 내지 한국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림을 알립니다. 또 하나는 철저히 학문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대상은 이 자료집에 나온 것에 국한하겠습니다.

본인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류교수의 국토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류교수가 반도라는 표현,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동북부에 있는 반도라는 표현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데 대해 세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발표자가 식민사관론자들의 이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식민사관론자의 대표자는 1960년대 초부터 역사학계에 제신 이기백 교수님입니다. 이기백 교수 이후 많은 역사 학자들이 식민사관 내지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론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지리적 운명론’으로 공박을 했는데, 이런 점을 류교수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반도라는 것은 결합기능과 고립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립기능과 결합기능을 다함께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반도가 고립기능만을 가지는 견해에 치우쳐 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량이나 의지를 바탕으로 결합기능, 좋은 의미의 결합기능쪽으로 이 반도적인 entity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ntity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반도적인 entity를 그냥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능, 통합적인 기능, 점진적인 기능을 어떻게 우리 능력에 맞게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류교수께서도 지적했듯이 아라비아, 이베리아,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과거 융성했던 나라들이 있었던 사실은 바로 반도가 갖는 결합기능 내지 긍정적인 기능의 발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가가 식민지로서 피해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표자가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비교적 냉철하지 못한 논리를 전개한 듯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발표자는 반도적 위치론을 열강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사이비 지리적 결정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적 위치론은 일제시대 어용사학자들이 한국지배논리를 전개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인식해서 그런 논조로 흐르는 것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entity,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리학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을 일단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자께서는 ‘유라시아 동단의 반도’라는 표현을 ‘아시아 태평양권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자가 의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라시아 동단의 반도라는 것은 하나의 entity이고, 아시아 태평양권의 중심지로 만들자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표현함에 있어 하나의 entity를 무시하고 기능적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표현의 비약인데, 그것이 적어도 학문적인 수준에서 타당한 논리가 되겠느냐하는 데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지리적인 entity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토의 크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

인 차원에서 ‘국토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발표자의 견해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우리 한반도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소개하면 political geographer지의 가장 설득력있는 자운즈의 국가분류를 따를 때 우리나라는 소국가에 속합니다. 남한만 따지면 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한을 모두 합해도 소국입니다. 현 소련과 대비해 한반도의 영토는 그들의 120분의 1입니다. 대략 미국의 42분의 1이고, 알제리의 11분의 1입니다. 남한만을 두고 비교하면 소련의 224분의 1이고, 미국의 92분의 1입니다. 알제리아의 24분의 1입니다. 83년말 현재 통계치를 자료로 산출된 세계 각국 영토 면적의 평균은 92.4만km²입니다. 이 수치는 소규모 독립국가의 생성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한반도의 22만km²와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우리 국토가 작다는 점을 인정하게 합니다. 국토가 작은 까닭으로 자원부족, 높은 해외의존도 등 불리한 점이 우리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가 좁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발표자의 의견대로 이를 어떻게 넓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entity를 현실에서 지나치게 비약시키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토개발정책의 시각교정 내지 확대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각교정론 내지 확대론에 대해 본인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표자가 세번째 제창한 ‘내륙에서 해양으로’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본인은 정치지리학강의에서 국제외교를 잘 해야 살 수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원이 별무하기 때문에 해양으로 진출해서 어업과 해양개발, 해상무역을 증진시켜 좋은 의미에서의 해상국가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입니다. 일찍이 19세기에 미국이 그러한 일을 했고 아시아에서도 현재 해상국가가 되려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기선을 잡아야 함을 주장합니다.

끝으로 류교수의 이런 국토인식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포괄적인 문제 제기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지리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좋은 나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 좋은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성교수: ‘국토의 재인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이어서 마치 철학자에게 ‘인간이 무엇이나’를 묻는 것과 비유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표하신 류선생님께서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신 분답게 포괄적이고도 어려운 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신하고 체계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 주제에 관해서 약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세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 국토공간 구조와 조화, 균형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고 모든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주제인 자연 환경과 문화경관의 보존이라는 것도 그 목표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국토개발계획이나 국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에 관한 일반적인 목표를 참고삼아 보면, 역시 국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인격과 개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회정이나 기회균등 등의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토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상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라는 국토관보다 더 큰 일반적인 국가관 또는 국가의 목표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이 정치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해서 급방 남북한 국토개발계획을 세우자는 식으로 시류에 편승하다 보면 또다시 장기적인 국토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국토개발계획으로 이끌리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적인 조류가 나타난 다음에 부랴부랴 그것에 맞추어 지역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늦은 때입니다. 산이 있어 오른다는 식으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고 지역에 애착을 갖고 시대의 조류에 관계없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이러한 연구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계획하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유명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독일의 일반적인 국토계획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크리스탈러 자신이 이 연구를 할 때는, 이것을 지역개발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장춘 교수 : 발표자께서 국토의 미래상을 설정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국토정책의 목표가 이 논문에서는 거의 가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먼저 국토정책 이념이 설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설정에 있어 통일을 전제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념을 설정했을 때, 이념간의 우선 순위에 의한 마찰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두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이 기대를 충족시켜 줄 바탕이 되는 현실적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의 논문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래를 보는 시각이 낙관론적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신의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 이후의 국토공간에 대해서 살펴 보았을 때 남북한 인구를 추정하여 보면 어림잡아 남한의 인구는 육천 만명이 될 것이고 북한의 인구는 삼천 만명이 될 것이기에 남북한 인구는 총 구천 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의 면적은 22만km²입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목표가 이 22만km²의 국토공간에서 구천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토 개발계획을 다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산지개발과 해양개발 등으로 폭넓게 논지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발표의 뒷부분에서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거나, 경관을 보전하자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발과 보전의 마찰과 갈등 문제로 앞 뒤의 연결성이 약간 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가공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류가 앞으로 당면할 위기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원고갈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여가의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 예로 본인이 수도권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보면, 1991년도에 이르러 가능한 수도권의 여가공간을 전부 개발하여도 적정수용상태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비율이 2001년도에는 23%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을 전제로 하든 안하든간에 우리나라 국토의 여가공간을 재편성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국토 여가공간을 재편성하는 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 문화경관의 보전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교수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덕현 교수 : 일체성 회복문제에 대하여 류교수께서 하나의 안으로서, 오늘 아침에 건설부장관의 차후 국토 종합 개발계획에 북한을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신의주를 경유해서 중국과 연결되는, 또한 원산 함흥쪽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체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체성 회복이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경제개발 동참을 빙자로 건설업 장사를 하려는듯 싶어 일견 자본주의적인 발상과 지나치게 직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체성 회복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로건설계획 등의 주창보다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지리학계에서 교육을 통해 북한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증오가 풀린 연후에 마음으로부터 일체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 개발을 통한 방법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1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류교수께서 토론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 : 임덕순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앞에 제시한 5가지 고정관념에 대하여 ‘도대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올까 우려했는데 임교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계시니 이번의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성 선생님께서는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 점에 관해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래 남북교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통일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제쳐놓고는 국토 문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과

거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조차도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류에 편승한 면이 있다면 충고는 기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장춘 교수께서 주문하신 국토개발의 상위이념 설정, 국토의 인구수용 한계의 문제, 개발과 보전의 갈등문제가 이 논문에서 미흡하게 취급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김덕현 교수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증오하느냐 하는 것은, 체제의 대치상태에 의해 그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남북한 운동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나 학자들이 한 학회에서 만났을 때, 또는 예술가들이 한 자리 모였을 때, 민족적 공감대의 형성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바로 알리고, 연구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토론하신 분들의 지적과 보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